

## 법과 사회

정답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②	08 ④	09 ①	10 ②
	11 ③	12 ③	13 ②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③

### 해설

- 01** 제시된 사례는 정의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ㄱ. 정의는 자연법론자들이 강조한다. 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는 정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ㄷ의 소멸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ㄹ도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법언이다.
- 02**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실증주의에서 강조된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ㄷ. 합법성을 강조한 것은 갑이다. ㄹ. 국가 권력에 대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성립시키는 요건에 해당한다.
- 03** 제시된 사례는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다. ① 친양자는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므로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②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소멸되므로 A는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③ 갑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재판상 이혼은 판결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04** (가)는 조정, (나)는 중재, (다)는 긴급 조정이다. ① 조정안이 거부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중재안은 당사자의 수락 없이도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③ 중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긴급 조정은 고용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의한다. ⑤ 중재의 회부 결정은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 05** ① 갑은 을의 배우자이므로 갑의 법정 상속액은 총 9억 원( $=3/7 \times 21$ 억 원)이다. 그러므로 갑은 4억 5천만 원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은 을의 1촌 인척이므로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③ 병과 무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 인척이 아니므로 혼인이 가능하다. ④ 태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부양의 의무는 경제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부여된다.
- 06** (가)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를 말하며, (나)는 국제 관습법을 말한다. ①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한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국제법의 법원이다. ③ 국제 관습법은 관행이 있어야 하며, 법적 확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한·일 어업 협정은 조약이다. ⑤ 법적 안정성을 위한다면 불문법이 성문화되어야 한다.

- 07 제시된 그림은 법의 적용 과정이다. ① 사실의 확정 = 법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② 법규는 실정법 모두를 말한다. ③ 판결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추정이 반대 증거만으로 법률 효과가 반복된다. ⑤ 성년 의제는 대표적인 간주에 해당한다.
- 08 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이다. 채권의 객체는 급부(행위)이다. ② 법인도 채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동산에 대한 공시는 점유에 의한다. ④ 을의 권리는 물권이다. ⑤ 갑과 을의 권리는 사권이다.
- 09 ㄱ.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ㄷ. B에 대한 을의 폭행은 정당 방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ㄹ. B가 을을 폭행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된다.
- 10 제시된 사례는 특별 실종에 해당한다. ㄱ.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존속인 병이 을의 후견인이 된다. ㄴ. 채무는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상속된다. ㄷ.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ㄹ. 실종 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 특별 실종은 실종된 후 1년 후에 가능하다.
- 11 제시문은 황건 계약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례이다. ① 황건 계약은 무효이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황건 계약이 무효이므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 ⑤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2 (가)는 권리 능력, (나)는 행위 능력, (다)는 의사 능력이다. ㄱ. 법인은 상속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없다. ㄴ. 20세 이상인 사람의 행위 능력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한정 치산이나 금치산 여부를 판단한다. ㄷ. 술에 만취한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ㄹ. 고등학생은 권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은 없다.
- 13 ① 상고가 고등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졌다. ② 심신 미약으로는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고 감경 사유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는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면제한 것은 아니고 감경만 인정한다. ③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불복으로 상고심에 해당한다.
- 14 갑, 을만 청소년이라고 했으므로 갑, 을은 모두 19세 미만이다. 갑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했으므로 14세 미만이고, 을은 책임 무능력자이며, 병은 19세이다.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성이 조각되어 형벌을 받지 않는다. ㄴ. 을이 19세 미만의 책임 무능력자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소년법상 촉법 소년(10세에서 14세 미만)인지는 알 수 없다. ㄷ. 책임 무능력자의 부모는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된다. ㄹ. 병은 19세이므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5 ①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② 사용자가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피용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③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④ 갑과 을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을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액만큼이 아니라 전액을 책임진다.
- 16 형법은 공법이며, 민법과 상법은 사법이다. 또한 민법은 일반법이며 상법은 특별법이다.
- 17 ㄱ은 참정권을 말하며, ㄴ은 청구권을 말한다. ㄷ, ㄹ. 헌법 재판소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다. 자유권은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포괄적이며 천부 인권적인 속성을 지닌다.
- 18 ①, ③, ⑤ 헌법 재판소는 판례에서 본인 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② 재판과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④ 헌법 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전제한다.
- 19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의 경우이며,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의 경우이다. ①, ②, ③은 모두 (가)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는 (나)의 경우에 해당하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⑤ (나)의 경우는 설치 및 관리의 하자를 전제로 한다.
- 20 ① 근저당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사용이나 수익할 수는 없다. ② 갑의 주택에 대한 권리의 선순위는 A은행이다. 세입자 을은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B은행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③ 임차권을 등기부 을구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에 기재된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을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으므로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을 갖게 된다. ⑤ 을은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B은행보다 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